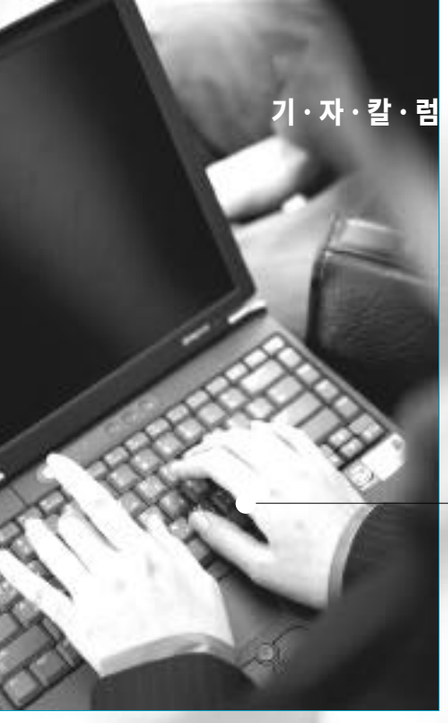

국민연금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까?

권 대 익 한국일보사회부기자

'사각지대(dead zone)'는 화기·레이더·관측의 유효거리 내에 있어도 장애물, 탄도 특성, 무기의 능력제한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일컫는 군사용어다.

그런데 어느새 이 말이 사회 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과 국민연금조차 낼 수 없는 극빈층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지난 3월 초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 추진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꼽을 정도로 사각지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층은 당연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시적 사정으로 납부 예외로 분류된 경우를 일컫는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은 4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처음부터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계층이나 주부들은 제외돼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당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초로 설계된 국민연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들을 모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75만명 중에는 실직자나 퇴직자나 350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사업중단, 주소불명,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3개월 이상 입원, 자연재해 피해자, 재소자 등 여러 부류가 있다.

이들은 연금 수급조건인 10년 이상 가입자격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납부예외자의 연금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결국 나이가 들어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영국,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와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로 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윗세대를 모시지 못하는 '불효 연금'인 셈이다. 그래서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려고 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와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 등으로 오히려 어정쩡한 형태를 띠게 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참여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참여 정부의 해결책은 국민연금 도입 이전에 노인이 된 계층에 대해 전혀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보호대상이 돼야 할 중하위 계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잘못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공적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2원화하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2원화 안은 기초연금을 통해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비례연금을 통해서는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개별적인 노후설계에 부합하는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삶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제를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도 "매력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선결조건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거나 정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 보험료 부담으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정치권은 먼저 현재 팽배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하고 국민에게 이 같은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기초연금제 도입 등 다각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결론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